

뉴욕시 공중전화 부스 완전히 사라졌다



▲ 뉴욕시 타임스퀘어 사내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공중전화 부스를 철거하고 있다. 사진=twitter(MarkLevineNYC)

뉴욕시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공중전화 부스가 철거됐다.

지난 25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뉴욕시 당국은 이틀 전 뉴욕 7번 예비뉴와 50번가 근처에 있던 뉴욕시 마지막 공중전화 부스 철거 작업을 마쳤으며 이를 뉴욕 박물관에 전시하기로 했다. 뉴욕시는 이 공중전화 부스가 박물관에서 컴퓨터 상용화 이전 도시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영화 슈퍼맨의 주인공 클라크 켄트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맨 오브 스틸로 변신할 때 쓰던 맨해튼의 구형 공중전화 부스 4개는 관광용으로 그대로 남겨두기로 했다.

2000년 초반 휴대전화 사용이 늘면서 유선 공중전화는 뉴욕 거리에서 서서히 모습을 감추다 2010년대 스마트폰이 보급된 후 더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이에 빌 더블라지오 전 뉴욕 시장은 지난 2014년 무료 전화, 와이파이, 전자기기 충전 등을 지원하는 '링크(Link) NYC'를 도시 곳곳에 설치해 공중전화를 대체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매슈 프레이저 뉴욕시 기술혁신국 국장은 "마차에서 자동차로, 자동차에서 비행기로 바뀌었듯 디지털 진화는 공중전화에서 와이파이 키오스크로 진보해 급변하는 통신 수요에 부합하게 됐다."고 말했다.

마크 러빈 맨해튼 자치구청장도 트위터에 "뉴욕의 유명(혹은 악명 높은) 공중전화에 안녕을 고한다."라며 "공중전화 박스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약간의 과거 향수를 느꼈다."고 썼다.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 참사에 '교사 무장론' 다시 등장

어린이 19명을 비롯해 21명의 목숨을 앗아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격 참사에 일부 공화당 정치인들이 '총에는 총으로 맞설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켈 팩스턴 텍사스주 법무장관은 전날 "교사와 교직원들이 훈련을 받고 무장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팩스턴 장관은 "아이들을 살해하는 총격범들은 법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총기 규제 강화법을 일축한 뒤 "차라리 준법 시민들이 무장하고 훈련을 받아서 이런 일이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테드 크루즈(공화·텍사스) 상원의원도 CNN 방송에 출연해 총기 소유권 규제는 효과적인 대책이 아니며 학교에 더 많은 경찰관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크루즈 의원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교정에 더 많은 무장 경관들을 두는 것이라는 사실을 과거의 경험들로부터 배웠다."고 말했다.

학교 총격에 대한 해법으로 교사 무장론을 내놓은



▲ 텍사스주 유밸디에 있는 록 초등학교에 총격 희생자들의 이름이 적힌 십자가들이 세워져있다. 사진=theglobeandmail.com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7명이 사망한 플로리다주 파크랜드의 고교 총격 사건 후 주 의회가 교사들의 무장 금지 규정을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더 강한 총기 규제를 촉구하는 민주당은 교사를 무장시키거나 무장 경관들을 학교에 더 많이 배치하는 방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텍사스주 소도시 유밸디의 한 초등학교에서 총격 참사가 발생해 교사 2명과 어린이 19명이 희생됐다.

'낙태 금지' 다음은 '어퍼머티브 액션'

미국의 보수파들이 낙태 금지 다음 목표로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입학 정책인 '어퍼머티브 액션'을 설정했다.

지난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보수단체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이 5월 초 어퍼머티브 액션이 불법이라는 취지로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보도했다.

하버드대 등 상위권 대학들이 입학 전형에서 흑인이나 히스패닉계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민권법 위반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민권법은 연방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이나 피부색, 국적을 이유로 차별적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이 특정 인종 학생을 뽑기 위해 혜택을 주는 것은 다른 인종 학생들에

게는 차별 행위라는 논리다.

지난 2016년 대법원은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NYT는 이번 아메리카 퍼스트 법률 재단의 상고는 이전의 위험 소송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과거 소송은 어퍼머티브 액션이 미국 헌법 정신에 배치된다는 광범위한 주장을 담았다면, 이번 소송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 인종적인 차별행위를 할 수 없다'는 민권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들어 소수인종 학생에 대한 혜택의 불법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저스틴 드라이버 예일대 법대 교수는 "대법원의 보수적인 판사들 입장에선 상고 이유서에 담긴 어퍼머티브 액션 폐지 논리가 상당히 매력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업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판: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562.404.0027 Fax 562.404.0039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info@townnewsusa.com